

투데이 칼럼

전북, 더 이상 변방 아닌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

“전북, 대한민국 미래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어 이제 44일 밖에 남지 않았다.

각 정당의 경선 열기는 뜨겁고 후보들의 유세 일정도 속 가쁘다. 하지만 이 와중에 유독 전북만이 이번 대선 선거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유세를 벌이고 있지만, 전북은 전남과 광주에 묶여 하나의 권역으로 처리됐다.

정작 후보들의 발걸음은 광주와 전남에 집중되고, 전북은 유세 지도에서 사라진 듯하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단순한 감정の問題가 아니다. 정치적 흥대가 반복되면, 그것은 곧 정책적 배제와 연결된다.

그동안 전북은 어느 정권에서도 충실히 힘을 보태왔고, 정권교체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건 늘 비슷한 무대였다. 나 무대였다.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면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적 결속이 동원되고, 선거가 끝나면 전북은 다시 주변부 변방으로 밀려난다.

현재 전북은 여러 중대한 국가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개발이 1987년에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38년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째 터럭거리다가 이제 조금 공장도 들어서고 있는 등 발전이 막 시작되고 있다.

울해에는 서울을 제친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와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특별법(대광법) 등이 전북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천재일우의 호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등 정책 집행자의 관심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광법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관련 예산은 한 톨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 등은 이미 17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을 확보해서 오 래전부터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새만금을 보자. 새만금개발은 단지 지역사업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관리하는 국가 중점 프로젝트이고, 전주 하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그런데 ‘주체’가 전북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심 밖에 놓이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북의 미래는 전북만의 과제 아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성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유세 일정에서 제외된 것은 단순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 유권자에 대한 무시이고, 나아가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전북은 매 선거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뿌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뒤로 미뤄도 괜찮은 땅’으로 여겨진다면 도민들의 마음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표를 얻기 위해 유세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공약을 내놓는다면 지금의 전북 흥대는 자승자박이다. 민심은 투표로 말한다. 그동안 묵묵히 참아온 도민들의 분노는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지평을 만드는 힘

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전북은 미래산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소재, 스마트 농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녹색 성장 비전이 바로 이 땅에서 움트고 있다.

새만금은 아시아의 중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가 현실화되면 지방정부가 국제 메가 이벤트를 주도하는 전례 없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정치의 응답이다. 말이 아닌 행동,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전북에 다가서야 한다.

지금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전략 기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제21대 대선은 전북에 있어 또 한 번의 기회이자 위기다. 외면 받는 지방이 아니라 주도하는 지역으로 전환하려면, 지금의 침묵은 깨어져야 한다. 정치권도, 후보들도, 이제 전북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표를 얻기 위해 허언 공약만 남발하기보다 약속한 사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말처럼 전북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을 준비하고 이를 차근차근 실천할 후보를 전북인은 선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설

버스요금 2400원 횡령 해고

8년 전 전주의 어느 버스회사 운전기사가 요금 2400원을 횡령해 해고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노동계가 들끓었다.

당시 판결의 당사자가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헌법 수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민사 1부 재판장이던 시절이었던 8년 전 내린 한 판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승객 4명이 현금으로 낸 탑승료 6,400원 중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기사가 낸 해고 무효 소송 2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무원노동자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다는 사유를 대며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어,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

버린 파렴치한 자이다.”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버스 요금 2,400원 횡령을 두고 “주요 수입원인 요금을 횡령한 것은 직원인 운전기사와 회사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해고가 노조 탄압과 관련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에서 내려진 해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해당 후보자를 두고 반노동 판사라는 평가에 이어 ‘실질적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냐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치는 판사를 지명하는 행위는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라는 것이다. 결국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가정연합 국제합동축복결혼식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이 최근 대한민국에서 열렸다. 가정연합은 12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DR콩고, 태국, 필리핀 등 90개국 5000명이 참여하는 2025 효정 천주축복결혼식’을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거행했다.

한학자 총재는 “육천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기적과 같은 자리”라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요, 대대손손 창조주 하늘부모님께 영광과 감사와 책임을 다하는 축복가정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도했다.

가정연합의 축복결혼식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이라는 평화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61년 36쌍 축복결혼식부터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주례로 진행됐다. 문 총재 성화 이후 한학자 총

재의 주례로 온라인 생방송 생중계로 국제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천주 축복식은 문선명·한학자 총재 성혼 65주년을 기념해 진행됐으며 정상급 지도자 및 각계 지도자를 포함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국가 위기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생율이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정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가정연합의 축복결혼식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좋은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2025 효정 천주 축복식 외에도 △천원궁 천일성진 입궁식 △국제국회의장회의(ISC) 창립총회 △World Summit 2025 △제6회 선화평화상 시상식 등 주요 행사가 경기도 가평 천원궁 박물관 주변과 서울 송파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부활절 축복 받을 준비하는 우크라 할머니



2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크라스네 마을에서 열린 정교회 부활절 행사 중 한 할머니가 축복받을 부활절 바구니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 폭격하는 게 자위권 발동이나”



20일(현지 시간)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이슬람주의 아동 자마아티 이슬리미(JI)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이스라엘의 공습에 반대하고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연대를 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